

## 정부지출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OECD Better Life Index를 중심으로\*

원영훈\*\*

윤지웅\*\*\*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된 코로나19는 국민 삶의 관점에서 향후 정부의 역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국가적 발전보다는 개인 삶의 측면에서 정부지출의 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정부지출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해 일관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며, 주관적인 삶의 만족으로 삶의 질을 측정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활용하여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지출은 삶의 질 종합지수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소득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지출 증가가 국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삶의 질의 개념적 변화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정부지출, 삶의 질,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 본 논문은 원영훈의 석사학위 논문 일부를 발췌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 제1저자, 경희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서 재학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분석, 과학기술정책 등이다(E-mail: powhy123@khu.ac.kr).

\*\*\* 교신저자, 카네기멜론대학교 Heinz 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분석, 과학기술정책 등이다(E-mail: jiwoongy@khu.ac.kr).

## I. 서론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이전의 전염병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부운영 방식, 그리고 향후 미래의 정부의 역할과 국민의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개인 및 기업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독일, 영국은 백신 개발 및 의료장비 등의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마저 전국민(홍콩, 싱가포르, 일본)을 또는 일부 국민(미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다.(박성욱 외, 2020). 이렇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서 보듯이, 미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인류의 역사라고 본다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을 위해 국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이론적으로 보면, 정부라는 조직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기존 연구는 정부지출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로 답을 찾고 있다.

정부지출의 영향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아직도 그 영향의 정도에 대한 합의된 결론은 없다고 판단된다. 대공황과 세계대전 동안,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강조하는 케인즈의 경제이론이 주목받았다. 그에 따라 20세기 중반까지는 경제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복지기능 수행을 위해 정부의 지출 수준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정부의 방만한 조직운영과 과도한 복지지출이 지적되었고, 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정철현·김정환, 2008). 이러한 논의 속에서,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정부의 시장개입의 적절성과 비효율적인 운영 정도를 판단하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Ram, 1986). OECD,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수의 연구에서 정부지출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Grossman, 1998; Fatás, & Mihov, 2001; Fölster, & Henrekson, 2001; Afonso & Furceri, 2010; Forte, & Magazzino, 2011), 중위소득 수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Guseh, 1997). 하지만 연구모형에 따라 정부지출이 경제지표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소 상반된 결과(Ram, 1986; Ghali, 1999; 김태은, 2008)들이 제시되면서 일관성 있는 결

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정부지출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르게 논의되었지만 미래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유럽국가들의 정부지출은 2차대전 직후 생산량 대비 30% 이하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GDP 대비 약 50%에 달하며(Hessami, 2010),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지출 수준은 2017년 기준 약 42.11% 수준에 달한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큰 규모의 지출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2.1조 달러(GDP 대비 10.7%)의 부양책을 추진하였다. 유럽은 EU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5,400억 유로, 각 국가별로는 독일이 7,560억 유로, 프랑스가 3,450억 유로 규모의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였다(이병운, 2020).

대한민국은 1980년대 이후 집권하는 정권마다 정권의 이념에 관계없이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정부지출 축소를 주장하였다(김태은, 2008).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등 각 정부는 출범과 함께 “작지만 강한 정부”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인력을 줄이고 유사·중복 기능을 지닌 부처를 통합하는 조직의 재조정을 통해 정부규모를 줄이려고 하였지만, 정권 후반기에는 공통적으로 직제가 확대되고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등 행정자원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김근세·권순정, 1997; 김근세·허아랑, 2015). 특히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위기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총 3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최근에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됨에 따라 전체 예산 규모는 2020년 본예산 512.3조 대비 554.7조(4회 추경안)로 증가할 예정(기획재정부, 2020)이며, 이에 따라 정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과 같이 국가적 차원의 발전보다는 감염병 전파와 같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영역에 미치는 위협요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더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최근 정부지출 연구들은 정부지출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정부지출과 국민의 삶의 질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출과 국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도 연구모형과 대상국가들에 따라 정부지출의 증가가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나는 반면(Bjørnskov et al., 2007; Yamamura, 2011; 김태형 외, 2018),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Hessami, 2010; Ott, 2010; 최정인 외, 2018; 박정인, 2019)을 미친다는, 다소 상반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요인들에 대응하여 투입되는 정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상국가의 특성, 지출시차, 삶의 질의 개념적 변화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정부지출과 삶의 질 간의 관계 보다 상세히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로 삶의 질을 측정하거나 (Bjørnskov et al., 2007; Hessami, 2010; Yamamura, 2011; 박정인, 2019) 객관적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었다(김두래, 2017; 최정인 외, 2018). 물론 다수의 연구에서 삶의 질은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인 사회상황을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었으나,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들을 포괄한 지수는 정부지출과 관련된 연구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록 가용가능한 코로나19 이전의 정부지출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는 정부지출이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여러 영역을 계량화하여 측정한 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이하 BLI)'를 활용하여, 삶의 질에 대한 정량화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다르게 선정하여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삶의 질의 개념적 변화에 따른 연구결과 차이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정부지출이 삶의 질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각 국가의 정부지출의 효과성을 거시경제적 차원이 아닌, 개인의 삶의 질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지출의 증가가 국민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삶의 질: 이론적 검토와 측정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1960~1970년대 심리학과 사회학을 중심으로 개인이나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이며, 무엇을 근거로 이를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했다(배정현, 2014). 삶의 질은 연구목적에 따라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행복(Happiness),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등 유사한 개념들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삶의 질을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중 어떤 요인을 더 강조하는지, 개인 수준에서 보는지 집합적인 사회 수준을 보는지에 대해서도 국가마다 처한 상황 또한 다르므로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이승철, 2014; 한병훈, 2015).

1960년대에는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ion Movement)을 중심으로 삶의 질에

대한 보편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이승철, 2014). 이후 물질적인 풍요나 GDP로 대변될 수 있는 경제적 발전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경제성장을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소득이 높아지고 결국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통해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진된다는 논리다(서문기, 2015).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추구하던 대다수의 국가들이 불평등, 빈곤과 같은 복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면서 삶의 질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달성하고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낮아졌다고 느껴진 것이다(심수진·이희길, 2015).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후에는 개인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 보다 다양한 요인들에 기반한 종합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배정현, 2014).

다수의 연구에서 삶의 질은 개인의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박희봉·이희창(2005)은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들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 및 주택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과 연령, 학력, 종교, 혼인과 같은 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요인들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철(2014)은 구미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삶의 질을 일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현(2014)은 아시아 8개국에 대해 정부의 질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삶의 만족은 아시아바로미터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정치적 안정, 정부효과성, 법의 지배에 관한 요인들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Ngoo et al.(2015)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아시아국가 28개국 대상으로 개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아시아바로미터 조사결과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소득, 교육, 정부의 역할에 대한 변수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삶의 질은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인 사회상황을 모두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구성물로 이해되었고(서문기, 2015; 최정인 외, 2018; 김태형 외, 2018; 박정인, 2019), 객관적·주관적 지표를 균형있게 고려하려 하였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1990년부터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수준, 평균 수명 등을 평가하여 각국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되었다. 인간개발지수는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였지만 3년 전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지표 수가 적고 단순하여 다양한 관심사를 포괄하는 삶의 질의 척도로 보기에는 어렵다(김상민·김현호, 2019). 이에 따라 인간개발지수와 유사한 정량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은 UN의 세계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World Database of Happiness(WDH), 갤럽월드폴(Gallup World Poll) 등에서 조사하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추가하여,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김두래(2017)는 교육, 보건, 복지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객관적 지표들로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5세 이하 영유아의 1,000명당 사망률(보건),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비율(복지), 25세 이상 성인 여성 및 전체의 평균 학령(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반면에, 김태형 외(2018)는 삶의 질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이라고 정의하였으며, UNDP의 인간개발지수를 객관적인 측정지표로, WDH에서 발표하는 삶의 만족도를 주관적인 측정지표로 선정하였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정부역량 관련 지수들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한병훈(2015)은 객관적 삶의 질은 UNDP의 인간개발지수를, 주관적 삶의 질은 갤럽월드폴에서 조사한 삶의 만족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정부역량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거버넌스 지표(Governance indicators)와 UN의 전자정부 지수를 활용하였다. 정부역량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에 관한 정부성과를 완전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문기(2015)는 객관적 삶의 질은 UNDP의 인간개발지수를 활용하였으며, 주관적 삶의 질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sup>1)</sup>에서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국가의 질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등의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최근 OECD에서는 BLI를 통해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 국가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한다. BLI는 거시적인 지표보다는 미시적인 지표들에 초점을 맞추며, 객관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지표들도 함께 측정하여 지표를 구성한다(박정인, 2019).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11개 영역(교육, 직업, 안전, 주거, 시민참여, 일과 삶의 균형, 건강, 삶의 만족, 환경, 소득, 공동체 의식)과 24개 지표(19개 정량, 5개 정성)로 구성되어 있다. OECD 가입국들의 삶의 질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 국가의 고유한 사회경제적 맥락과 비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김상민·김현호, 2019).

1)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는 57개의 조사대상국을 대상으로 사회발전의 13개 핵심영역을 중심으로 설문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전반적으로 당신은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또는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의 답변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서문기, 2015).

## 2. 정부지출의 효과

정부지출에 대한 연구는 크게 국가간 비교를 통해 현재 정부의 지출수준이 적절한지 판단한 연구(강인성, 2008; 윤광재, 2008; 정철현·김정환, 2008), 정권변화에 따라 정부인력, 조직, 지출 등 실질적인 정부규모 축소가 이루어졌는지를 규명한 연구(김근세·권순정, 1997; 김근세·박현신, 2009; 김근세·허아랑, 2015), 정부지출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연구(하태수, 2007; 홍근석·김종순, 2012), 정부지출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Ram, 1986; Feldmann, 2006; 김태은, 2008; 문지은, 2009; Asimakopoulos & Karavias, 2016)로 구분된다.

강인성(2008)은 OECD 주요국의 인력규모 변화, 윤광재(2008)는 OECD 국가들의 정부기능분류(COFOG)에 따른 지출 변화를 통해 국가간 비교를 통해 현재 정부의 지출 수준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였다. 국내에서는 정권변화에 따라 조직, 인력, 예산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정부규모 축소가 이루어졌는지를 규명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김근세·권순정(1997), 김근세·박현신(2009), 김근세·허아랑(2015)에서는 조직·인력·예산·법령의 측면에서 김영삼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의 재임기간 동안 정부규모가 어느 정도 변동되었는지를 규명하였다.

정부지출에 대한 연구, 특히 국외연구들은 주로 정부지출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정부지출의 증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Ram(1986)은 1960~80년 시장경제체제 국가 115개국을 대상, 정부영역과 비정부영역의 투입생산성 비교를 통해 정부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지출의 증가는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은(2008)은 국가군을 OECD와 비OECD로 구분한 후, 정부의 양적규모와 질적규모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OECD국가군에서는 양적 규모변수인 GDP대비 일반정부 소비지출이 1인당 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비OECD국가군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정부규모로 활용된 세금변수는 OECD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개입변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simakopoulos & Karavias(2016)는 1980년부터 2009년까지 129개국의 패널데이터를 통해 정부의 지출 수준과 경제성장률의 역U자형 관계를 통계적으로 입증하였다.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Feldmann(2006)는 정부지출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정부의 총지출 수준의 증가는 실업률을 상승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과 장기실업 집단에 대해서는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미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지만, 정부지출을 그만큼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금부과와 부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문지은(2009)은 정부지출이 정부효과성<sup>2)</su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지출과 정부효과성은 역U자 형태의 곡선 관계를 가지게 되어, 일정 수준의 임계점 이전까지는 정부지출이 정부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그 이후부터는 성과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출이 증가한 이유와 그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정부는 주로 시장에 의한 부적절한 자원배분을 교정함으로써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Bjørnskov et al., 2007). 정부는 시장에서 적정수준 이하로 제공되는 공공재를 생산하고 적절한 세금 징수를 통해 외부효과를 조절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효용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Hessami, 2010; 윤상호, 2016).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시장의 균형상태에 해당하는 수준의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며, 정책결정자는 그에 따라 정부의 지출 수준을 결정한다고 본다. 즉, 현재 정부지출 수준은 시장에서의 균형상태에 적합한 수준이며, 정부지출의 변동은 삶의 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Hessami, 2010).

반면, 1970년대 이후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해석을 중심으로 정부지출 및 시장개입 축소를 주장하는 ‘작은정부론’이 대두되었다(김근세·권순정, 1997). 공공선택이론에 따르면, 관료와 정치인들, 그리고 이익집단들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도록 고용된 일꾼이지만, 개개인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인이기 때문에(김성철 외, 2005), 사회의 적정수준보다 과도한 정부지출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Bjørnskov et al., 2007; Hessami, 2010). Niskanen(1971)은 이러한 행태를 예산극대화 모형을 통해 설명한다. 관료들은 봉급, 재직가능성 등 일정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 정부의 지출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행태를 보이며, 그 결과로 산출물의 질과 생산효율성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강인성, 2008). 또한,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인지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지휘 및 감독

2) 본 지표는 세계은행에서 1994년부터 격년, 2000년부터는 매년 발간하고 있는 정부효과성 지표로, 공공서비스 공급의 품질, 관료제의 품질, 공복으로서의 능력(competence of civil servants),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시민서비스의 독립정도, 정부가 정책에 대해 가지는 헌신에 대한 신뢰성 등으로 정의된다(문지은, 2009).

해야 하는 정치인들은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효용보다는 투표와 직결되는 자신의 지역구 정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김성철 외, 2005), 이익집단들은 지속적인 로비활동을 통해 공익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공 프로젝트의 실행을 유도하여 정부지출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려 한다. 이렇게 커져버린 정부조직, 인력과 다양한 정책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의 투자가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출은 쉽게 축소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Bjørnskov et al., 2007).

정부 팽창에 비판적인 공공선택이론의 논의는 신공공관리론으로 이어진다. 신공공관리론은 1970년대 이후 정부의 방만한 조직운동을 비판하면서 정부영역에서도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공공관리론에 따르면, 공무원은 사익을 추구하는 주체로 인식되며, 또한 행정서비스가 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시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떨어지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본다(김근세·박현신, 2009). 신공공관리론은 이렇게 정부의 독점으로 인해 발생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계층제적이고 집권적인 관료제 조직에서 탈피하기 위해 정부구조를 시장주의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분권적이고 다원적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김근세·권순정, 1997). 신공공관리론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각국의 정부들은 민영화, 민간위탁, 규제완화 등 시장 지향적인 처방을 통해 정부인력 및 지출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줄이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다(강인성, 2008).

정부지출 팽창을 비판하는 논의들을 정리하면, 정부지출이 증가할수록 정부의 기능은 비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Ram, 1986), 국민들은 지불한 세금에 대비하여 충분한 보상(reimbursement)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Hessami, 2010). 정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활용되는 자원이 축소되며, 일반적으로 정부 내부의 정치과정은 시장에 비해 역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및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문지은, 2009). 그 결과 기술진보, 생산성, 국제경쟁력 등이 하락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하고(Feldmann, 2006),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들이 추진하였던 신자유주의 행정개혁은 정부영역에 성과평가 및 경쟁원리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작은 정부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인력, 조직, 지출의 축소에만 치중한 나머지 인적 자원을 축적시키지 못하고 정부의 서비스 제공 및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강인성, 2008). 또한, 정부의 적정지출 수준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

긴 작은 정부를 목표로 추진하는 개혁은 국가 역량을 감소시킬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역민영화, 역계약관계 등 민간부문에 이양할 수 없는 정부의 핵심 기능 및 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정철현·김정환, 2008).

최근에는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가 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않을 경우, 자원 소유의 불공평으로 인해 개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이지은·이영범, 2017).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의료가기술들이 점차 시장에 도입되면서 국민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sup>3)</sup>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단에게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은 국민의 삶의 질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손수인 외, 2010), 전염병 및 각종 재난재해 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수준은 가구의 경제적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우경숙·신영전, 2015). 교육, 보건 등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객관적 삶의 조건과 만족도를 높이고, 이는 국민의 경쟁력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서문기, 2015).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부지출의 증가는 국가의 재정위기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한정적인 정부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보다 전략적인 정책과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다(양종민, 2013).

### 3. 정부지출과 삶의 질의 관계

기존에는 정부지출의 성과를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지표를 통해서 측정하고 평가하려는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연구에 따라서 정부지출의 증가가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Ram, 1986; 김태은, 2008)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Feldmann, 2006)들이 제시됨에 따라 정부지출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에 대해 완결된 일반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또한, 그간의 연구들이 지나치게 경제성장 변수와의 관계만 탐색하면서(문지은, 2009), 교육수준이나 건강, 환경 등 현대 사회에서 주목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김태형 외, 2018). 국민의 삶과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직결되어 있으며, 정부지출에 따른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이 거시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영역 수준에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부지

3) OECD 주요국들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5.3% 수준이었지만, 2001년에는 8.2%(OECD 2004, 8),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17년에는 8.8% 수준까지 증가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9, 106).

출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지출과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되는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우선, 정부지출의 지속적인 팽창이 국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과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 Bjørnskov et al.(2007)은 74개국에 대한 패널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집단별로 보기 위해 성별, 소득수준, 정치 성향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 총지출의 증가는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집단별로는 저소득과 중소득, 남성집단, 진보성향집단에서 정부의 지출확대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amamura(2011)는 47개 도·현 등 지방행정구역 단위에서 패널분석을 진행하였으며, 1979년과 1996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각 지방정부의 지출 증가는 1979년의 주민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장이 진행된 1996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김태형 외(2018)는 187개국에 대해 정부의 질과 규모(지출)가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부지출의 증가는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국가들에서는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OECD국가들에서는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지출의 증가가 국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Hessami(2010)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인 EU국가 12개국에 한하여 정부지출의 증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지출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공선택이론에 따른 가설은 기각되었다. Ott(2010)는 WDH의 행복지수와 정부지출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정부지출이 불평등과 관련된 지수와는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닌 반면, 행복지수 평균과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정인 외(2018)은 144개국에 대해 일반정부 총지출을 통제변수로 활용, 정부의 질적 측면과 삶의 질 간의 관계 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정부지출 수준이 큰 국가일수록 정부의 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정인(2019)은 65개국에 대해서 정부의 질과 규모(지출)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지출의 증가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설계

#### 1. 실증모형 및 가설

정부지출과 국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지표구성과 연구모형 설계, 대상국가에 따라서 다소 상반되는 결과들이 도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의 지속적인 팽창이 국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Bjørnskov et al.(2007)는 이를 공공선택이론에 따라 정부지출 수준이 사회의 최적수준보다 과도하게 많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의 증가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Hessami, 2010; Ott, 2010; 최정인 외, 2018; 박정인, 2019). 정부는 여전히 경제영역에서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필수적인 참여자이며(Bjørnskov et al., 2007),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 전세계적인 재난상황 발생 등에 따라 향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영역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점차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방역을 위한 이동의 제한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가계 및 기업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기대되는 상황이다(박성욱, 2020). 따라서 경제적 발전수준이 유사한 국가집단에 한하여 정부지출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보다 상세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1. 정부지출이 증가할수록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도출된 가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측면에서 정부지출이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정부지출은 OECD에서 제공하는 일반정부의 총지출액(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의 로그변환값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국민의 삶의 질은 OECD의 BLI의 종합점수를 통해 측정한다. 하지만 BLI를 구성하고 있는 24개의 세부지표별로 측정연도가 상이하여, 일정한 측정 기준연도를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OECD Statistics<sup>4)</sup>에 제시된 2013년부터 2018년도

4)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2020. "Better Life Index" <https://doi.org/10.1787/data-00823-en>. 검색일 2020년 4월 20일.

까지의 세부지표별 측정연도의 평균을 조사한 결과, BLI 발표연도 대비 2년 전의 자료들이 3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발표연도 대비 3년 전(25.0%) 자료들이 사용된 비중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점차 낮아져 2013년도 기준 25.0%에 비하여 8.3%(2017년도), 20.8%(2018년도)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반면, 발표연도 대비 1년 전 자료의 활용빈도는 높아져, 2018년에는 발표연도 대비 2년 이내의 자료들의 활용비율이 6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표 발표연도에서 시차가 멀어질수록 누락되는 데이터로 인해 패널자료의 표본이 점차 감소하며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LI가 발표된 연도의 종합점수가 최소 2년 전 자료들에 기반하여 산정되었다는 가정 하에 설명변수들의 시차를 고려하여 (1)과 같은 모형을 작성하였다.

$$\begin{aligned}
 Y_{i,t} = & \beta_0 + \beta_1 \ln G_{i,t-2} + \beta_2 DM_{i,t-2} + \beta_3 CR_{i,t-2} + \beta_4 RL_{i,t-2} + \beta_5 \ln GBP_{i,t-2} \\
 & + \beta_6 (\ln G_{i,t-2} \times DM_{i,t-2}) + \beta_7 (\ln G_{i,t-2} \times CR_{i,t-2}) + \beta_8 (\ln G_{i,t-2} \times RL_{i,t-2}) \\
 & + \beta_9 (\ln G_{i,t-2} \times \ln GBP_{i,t-2}) + \beta N + \beta Y + \epsilon_i
 \end{aligned}
 \tag{1}$$

모형(1)에서  $i$ 는 국가( $i=31$ ),  $t$ 는 연도( $t=2013\sim 2018$ )를 나타낸다. 본 모형에서는 정부지출이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정부지출 이외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질적 수준(민주주의 수준, 법·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경제적 요인(1인당 GDP)을 통제하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발표연도 대비 2년 이내의 자료들의 활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최소한 발표연도 대비 2년 전( $t-2$ )부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모형을 구성하였다.  $Y_{i,t}$ 는 국가  $i$ 의  $t$ 년도 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며, BLI가 발표된 연도의 종합점수를 말한다.  $\ln G_{i,t-2}$ 은 국가  $i$ 의  $t-2$ 년도 정부지출액의 로그변환값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정부의 질적 수준, 즉 정부의 운영과정에서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민주주의 수준( $DM$ ), 부패인식 지수( $CR$ ), 법의 지배( $RL$ )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정부지출과 조절변수들 간의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추가하였다. 또한, 국가별 특성과 시간적 특성도 고려하기 위해 31개 국가 더미변수( $N$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각 연도 더미변수( $Y$ )를 추가하였다.

하지만 발표연도 대비 2년 전 자료들의 비중(38.9%)이 1년 전(22.2%), 3년 전(25.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니며, 정부지출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발생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표연도 대비 3년 전( $t-3$ )과 4년 전

(t-4) 자료들에 기반한 모형을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관련 변수들의 시차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정치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제시한 민주주의 수준(DM)은 한 국가의 정치적 성숙도 및 안정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이며, 부패인식지수(CR)와 법의 지배(RL)는 법과 정책 집행의 공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해당 국가 고유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반영할 여지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단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lnGBP)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쉽게 변하기 어려운 지수로 생각된다. 특히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수준 이상을 이미 달성한 OECD 회원국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이나 쇠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변수들은 2년 전(t-2) 자료들로 고정하여 정부지출 시점에 따른 효과만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삶의 질의 개념적 정의와 측정방식에 따라 정부지출이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득은 국민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삶의 질을 고려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연구들에서부터 물질적 풍요나 GDP로 대변될 수 있는 사회의 경제적 수준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인식되었으며, 여전히 삶의 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서문기, 2015).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일수록,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양적·질적으로 보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Easterlin et al., 2012). 따라서 최대한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삶의 질을 정의한 모형(1)과 달리, 소득에 대해서는 정부지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BLI 중 소득에 관한 측정지표만을 분리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소득은 BLI의 측정영역 중 소득(Income)의 세부지표인 '가계 순가처분소득(US\$)'과 '가계금융순자산(US\$)'을 통해 측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도 정부지출이 미치는 영향의 시차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발표연도 대비 3년 전(t-3)과 4년 전(t-4) 자료들에 기반한 모형을 추가하였다.

가설2. 정부지출이 증가할수록 소득 관련 삶의 질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begin{aligned}
 I_{i,t} = & \beta_0 + \beta_1 \ln G_{i,t-2} + \beta_2 DM_{i,t-2} + \beta_3 CR_{i,t-2} + \beta_4 RL_{i,t-2} + \beta_5 \ln GBP_{i,t-2} \\
 & + \beta_6 (\ln G_{i,t-2} \times DM_{i,t-2}) + \beta_7 (\ln G_{i,t-2} \times CR_{i,t-2}) + \beta_8 (\ln G_{i,t-2} \times RL_{i,t-2}) \\
 & + \beta_9 (\ln G_{i,t-2} \times \ln GBP_{i,t-2}) + \beta N + \beta Y + \epsilon_i
 \end{aligned}
 \tag{2}$$

또한, 일반적으로 임상분야에서 ‘삶의 질’은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지 (health status), 또한 일상생활을 수행할 때 질병으로부터 어느정도 영향을 받는지 (functional status)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된다. 게다가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인지하는 가도 개인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임상분야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을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게 다뤄진다(Duffy, 2007).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정부의 보건지출이 영아사망률, 평균기대수명, 인간개발지수(HDI: 평균기대수명, 성인문맹률 및 교육수준 포함) 등에 미친 영향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보건 지출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정부보건지출의 증가는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azmi et al., 2012; Novignon et al., 2012; Yaqub et al., 2012; Kim & Lane, 2013), 일부 저소득국가들의 경우 정부 보건지출의 증가가 영아사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Issa, 2005). 다만, 정부가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지출과 삶의 질의 관계를 보건지출의 영향력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지출뿐만 아니라 안전, 경제, 환경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정부의 전체지출이 총체적으로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며, 위에서 제시한 다른 모형들과의 비교를 통해 삶의 질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정부지출의 영향력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바탕으로 정부지출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건강은 BLI의 측정영역 중 건강 (Health)의 세부지표인 ‘기대수명(세)’과 ‘자기보고 건강상태’를 통해 측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도 정부지출이 미치는 영향의 시차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발표연도 대비 3년 전(t-3)과 4년 전(t-4) 자료들에 기반한 모형을 추가하였다.

*가설3. 정부지출이 증가할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begin{aligned}
 H_{i,t} = & \beta_0 + \beta_1 \ln G_{i,t-2} + \beta_2 DM_{i,t-2} + \beta_3 CR_{i,t-2} + \beta_4 RL_{i,t-2} + \beta_5 \ln GBP_{i,t-2} \\
 & + \beta_6 (\ln G_{i,t-2} \times DM_{i,t-2}) + \beta_7 (\ln G_{i,t-2} \times CR_{i,t-2}) + \beta_8 (\ln G_{i,t-2} \times RL_{i,t-2}) \\
 & + \beta_9 (\ln G_{i,t-2} \times \ln GBP_{i,t-2}) + \beta N + \beta Y + \epsilon_i
 \end{aligned}
 \tag{3}$$

## 2. 표본 및 데이터

본 연구는 OECD의 일반정부 총지출과 BLI를 활용하였다. OECD에서는 매년 「Government at a Glance」를 통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OECD 회원국들의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Government at a Glance」에서 제공되는 일반정부 총지출은 국가별 화폐에 따른 지출 수준을 말하며,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화폐단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정하기 위해 동자료에서 제공하는 'GDP 대비 일반정부지출 비율'자료와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대학의 국제비교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Comparisons)에서 발표하는 Penn World Table 9.1에서 제공되는 구매력평가지수 대비 GDP(백만달러)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BLI는 OECD에서 2011년부터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삶의 질 지수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11개 영역(교육, 직업, 안전, 주거, 시민참여, 일과 삶의 균형, 건강, 삶의 만족, 환경, 소득, 공동체이익)과 24개 지표(19개 정량, 5개 정성)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정부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 인식지수'를 활용하였으며,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제공하는 '민주주의 지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거버넌스지수 중 '법의 지배'를 활용하였다.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Penn World Table 9.1'에서 구매력평가지수를 고려한 1인당 GDP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총 6개년의 OECD 소속 31개국이다. 일반적으로 통계자료는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OECD는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통일된 자료 확보가 용이하다(정철현·김정한 2008).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다양한 표본, 다수의 이질적인 국가들을 분석에 활용한 것과 달리(Bjørnskov et al., 2007; Ott, 2010; 김태형 외, 2018; 최정인 외 2018; 박정인, 2019), OECD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사회·경제적 수준을 달성한 동질적인 집단이다. 이에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준거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분석범위는 종속변수인 BLI는 통계자료가 공개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독립변수인 정부지출은 t-4년도까지의 시차를 고려해 2009년부터 2016년까지로 한정한다. 현재 OECD 소속 국가는 36개국이지만, OECD국가 중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의 경우 정부기능분류에 따른 GDP 대비 정부지출비율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리투아니아 등 BLI 지수 중 일부 세부지표가 일부 누락된 국가의 해당 연도 데이터들을 모두 제외하였다. 이외에도 특정연도에 BLI 지수들을 모두 공개하고 있지 않아 삶의 질 종합지수를 계산할 수 없는 국가-연도 데이터들을 모두

제외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국가는 총 31개국이며, 국가별로 활용한 구체적인 데이터의 범위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 1) 종속변수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결과 주로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었다. Bjørnskov et al.(2007)은 세계가치조사의 주관적 만족도 조사 중 8-10점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으며, Hessami(2010)는 유로바로미터조사에서 발표한 주관적 삶의 질을 활용하였다. 박정인(2019)은 UN의 세계행복 보고서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주관적 삶의 지표들은 설문시점의 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지표로써 한계를 지니며(최정인 외, 2018), 삶의 질은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 측면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삶의 질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서문기(2015), 김태형 외(2018)은 주관적 삶의 만족뿐만 아니라 UNDP의 인간개발지수를 활용하여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인간개발지수는 문자해독률, 교육기간, 1인당 구매력, 기대수명 등 인간다운 삶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되며, 환경,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삶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지표라고 생각된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평가받는 OECD 집단에서는 문자해독률과 같은 지표들보다는 좀 더 다양한 가치들을 포괄할 수 있는 지표들에 기반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OECD에서 매년 발표하는 BLI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한다. BLI는 11개 영역(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과 영역별 총 24개의 지표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표 1〉 참고). 정량적인 지표의 비중이 높으며, 삶의 질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제한적이지만, 국제적인 수준에서 주요 영역별로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지표이다.

현재 OECD에서는 BLI의 종합점수 및 관련 산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이용자가 측정영역 각각이 삶의 질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심수진·이희길, 2016). BLI는 삶의 질을 계량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각 지표들은 비율, 미국달러, 점수, 기간, 수명 등 측정단위가 상이하여 지표 간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고 특정 지표의 영향력이 과대 또는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댓값과 최솟값을 기준으로 각 지표들의 값이 0에서 1 사이에 올 수 있도록 정규화하였다. 물

론 정해식·김성아(2015)는 소득과 부의 영역이 환경의 질과 같은 기타 영역보다 삶의 질에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 물질적 삶의 조건(주거, 소득, 직업)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이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영역별 중요도는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 지표별로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도출된 세부지표별 평준화 산식은 다음과 같다.

$$z_a = \frac{x_a - \min(x)}{\max(x) - \min(x)}, x = x_1, \dots, x_n \quad (4)$$

반면, ‘장기 실업률(직업)’, ‘대기오염(환경)’, ‘살인율(안전)’, ‘장시간 근로자(일과 삶의 균형)’ 등 일부 지표들은 수치가 높아질수록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가계 순가처분소득(소득)’, ‘고용안정성(직업)’ 등 수치가 높아질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는 다른 지표들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다른 지표들과 동일한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4개의 세부지표에 대해서는 최댓값 1점에서 해당 지수의 값을 빼서 역수로 전환하였다. 또한, ‘안전’ 영역은 ‘살인율’ 외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공격받을 확률(Assault rate)’, 2016년부터는 ‘야간보행 안전도(안전)’를 통해 측정되었다. 따라서 ‘야간보행 안전도’를 포함해서 안전 영역의 삶의 질을 계산할 경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일관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해당 지표는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이후 각 영역별로 세부지표들의 평균을 계산하여 11개의 영역별 점수를 산출하였다. 종합적인 삶의 질 지수는 영역별 점수들의 평균을 통해 도출하였다.

〈표 1〉 더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 BLI) 구성

영역	지표	정의	활용
주거 (Housing)	기본시설이 없는 가구에 사는 인구비율	단독으로 사용하는 실내 수세식화장실 보유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거관련지출(%)	주거관련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및 수선유지비용의 합이 가계의 순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개인당 방수(%)	주택의 방수를 거주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	○
소득 (Income)	가계 순가처분소득(US\$)	직접세 및 사회보장분담금,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가계의 임금, 재산 및 임대 소득 등 순가처분소득	○

영역	지표	정의	활용
	가계금융순자산(US\$)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계기준 가계 보유 금융자산 (현금, 채권 및 주식 등)	○
직업 (Job)	고용안정성(%)	전년도에 고용된 사람 중에서 다음 년도에 실업자가 된 사람의 전년도 고용자수 대비 비율	○
	고용률(%)	근로가능연령인구(15~64세)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에 고용(1시간 이상)된 인구의 비율	○
	장기 실업률(%)	만 15~64세 인구 중 1년 이상 실업상태 (취업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함)에 있는 사람의 비중	○(역수)
	개인소득(US\$)	정규노동자의 연평균 소득	○
공동체 (Community)	지원관계망의 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교육 (Education)	교육 이수(%)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을 보유한 성인(15~64세)의 비중	○
	학생들의 역량(점)	독해, 수학 및 과학에 관한 PISA 평가 점수	○
	기대교육기간(년)	만 5세 어린이가 39세까지 공식교육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
환경 (Environment)	대기오염	인구 10만명 이상 대도시의 큐빅 미터당 미세먼지(PM2.5) 농도(마이크로 그램)	○(역수)
	수질(%)	살고 있는 지역의 수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	○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규칙 제정에의 참여(점)	법과 하위 규정 도입시 이해당사자의 공식적 참여 수준을 지수화	○
	투표 참여율(%)	선거에 참여한 인구 비율(선거등록 인구 대비)	○
건강 (Health)	기대수명(세)	현재의 사망률에 근거한 평균적인 기대 수명	○
	자기보고 건강상태(%)	"전반적으로 당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견은?"이란 질문에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율	○
삶의 만족 (Life Satisfaction)	삶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10:매우만족~0:매우불만족) 평가에 대한 개인별 점수의 평균	○
안전 (Safety)	야간보행 안전도(%)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	-
	살인율(%)	인구 10만명당 경찰에 신고된 피살자 수	○(역수)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	장시간 근로자(%)	주 50시간 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의 비중 (자영업자 제외)	○(역수)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통상적인 날에 여가 및 개인적인 돌봄(수면 및 식사 포함)에 사용한 시간	○

자료 : 김상민 · 김현호. (2019). 22-24.

## 2) 독립변수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율(Feldmann, 2006; Bjørnskov et al., 2007; 하태수, 2007; 김태은, 2008; 윤광재, 2008; 문지은, 2009; Asimakopoulos & Karavias, 2016; 김태형 외, 2018.; 최정인 외, 2018; 박정인, 2019)을 통해 정부지출의 영향력을 측정하려고 하였다. 국가별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정부의 지출액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며,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국가단위에서 유의미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을 주로 GDP 대비 비율로 측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지출 GDP 대비 비율로 측정할 경우, 일관성 있게 다른 설명변수들도 GDP 대비 비율로 측정하여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지출뿐만 아니라 다른 설명변수들에 대해서도 국가 발전수준을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변수의 측정값이 GDP 대비 비율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주거, 고용, 환경, 건강 등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는 BLI가 GDP 규모에 종속되어 크게 변동될 여지가 존재하며, 삶의 질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GDP 대비 비율로 한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반정부 총지출(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을 통해 정부지출을 측정하고자 하며, 1인당 GDP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국가별 경제발전 수준을 통제하고자 한다.

## 3) 조절변수

단순히 정부지출만을 고려한다면 정부정책의 효과와 그 범위를 과소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며, 정부의 질, 기능과 역량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정부규모를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된다(문명재, 주기완 2007). 하지만 정부의 질과 역량에 관한 연구들은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수가 국민의 주관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분석에만 주로 매몰되어 있으며(배정현, 2014; 한병훈, 2015; 서문기, 2015; 박정인, 2019), 정부의 질, 역량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Rothstein & Teorell(2008)에 따르면, 정부의 질 개념은 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민주성(democracy)과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impartiality)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구성된다.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은 국가마다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 특정 정책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 운영의 절차적 측면만으로 정부의 질을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Rothstein & Teorell, 2008).

공공선택이론에 따르면, 관료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

의 적정수준보다 과도한 재정지출을 유도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Hessami, 2010). 하지만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정부 관료들의 비효율적인 행태를 감시함으로써 과도한 재정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정부를 민주적 기제를 통해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면,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선호가 반영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Bjørnskov et al., 2007). 이러한 공공선택이론의 논의를 검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이 정부지출과 삶의 질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의 민주성(democracy)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민주주의 수준, 정치적 안정성 등의 지표들을 활용하였다. 문지은(2009)과 박정인(2019)는 'Polity IV Project(2005)'의 POLITY IV 지수를 국가의 민주적 수준과 정치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설정하였다. Bjørnskov et al.(2007)은 정치적 경쟁수준(political competition), 사회적 신뢰도(social trust),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가스틸 지수(Gastil index)를 활용하여, 정치적 요인이 주관적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정보분석기구(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2〉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지표

항목	개념		측정지표	범위	출처
종속 변수	삶의 질 종합지수		Better Life Index의 11개 영역별 수치의 합	0~1점	OECD
		소득	Better Life Index 중 '소득'영역 지표	0~1점	
		건강	Better Life Index 중 '보건'영역 지표	0~1점	
독립 변수	정부지출		일반정부지출(log)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s :백만달러)	-	
통제 변수	정부의 질적 수준	민주주의 수준	EIU의 민주주의 지수 (Democracy index)	0~100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법률·정 책 집행의 공정성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0~100점	국제투명성 기구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항목	개념		측정치표	범위	출처
			법의 지배 (Rule of law)	0~10점	세계은행 (World Bank)
	경제적 요인	경제성장 수준	1인당 GDP(log) (GDP : Expenditure-side real GDP at current PPPs, 백만달러)	-	Penn World Table

또한, 공공선택이론에 따라 정부지출이 과도하게 많이 지출되고 있다면,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자기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태들을 보이고 정부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김성철 외, 2005). 따라서 정부지출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률이나 정책 집행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패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법과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의 공정성(impartiality)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거버넌스 지수 중 부패의 통제, 법의 지배 등의 지표들을 활용하였다. 김태형 등(2018)은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수 중 부패의 통제를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방지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Hessami(2010)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활용하여 한 국가의 부패 정도가 주관적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률이나 정책 집행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에 따라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변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거버넌스 지수 중 '법의 지배'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지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1인당 GDP, 인플레이션, 실업률, 무역개방도 등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김태은(2008)은 정부지출 성과를 경제성장률을 통해 측정하였다. 정부지출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정부의 경제수준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 1인당 GDP(김태형 외, 2018; 박정인, 2019), 또는 GDP의 로그변환 값(Bjørnskov et al., 2007; Hessami, 2010)을 활용하였으며, Hessami(2010)는 추가적으로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펜실베니아 대학의 'Penn World Table 9.1' 자료 중 구매력 평가지수(PPP) 대비 1인당 GDP를 활용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지출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Tanzi et al.(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 경제발전을 달성한 서구 선진국에 비해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들의 공공부문 지출효율성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문지은, 2009).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서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변동되

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31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개년도에 대해서 종속변수인 BLI의 조사결과를 수집하였다. 23개의 세부지표들의 값을 앞서 제시한 산식에 따라 0~1 점으로 평준화하였으며, 영역별 지표들의 평균값을 통해 11개의 영역별(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의식,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삶의 질 지수를 각각 산출하였다. 종합적인 삶의 질 지수는 영역별 지수들의 평균을 통해 계산하였다. OECD의 BLI가 발표되는 연도를 기준연도로 설정하며, 시차에 따른 정부지출의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준연도 대비 2년 전(t-2), 3년 전(t-3), 4년 전(t-4) 자료를 활용하여 모델을 구축하였다. 추가적으로 각 패널자료에 존재하는 국가들의 고유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31개 국가에 대한 더미변수를 추가하였고, 시간변화에 따른 특성도 통제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각 연도도 더미변수로 추가하였다. 삶의 질 지수 일부가 누락된 데이터들은 제거하였고, 삶의 질의 영역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또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은 시차를 고려하여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표 3>에서는 BLI의 발표연도 대비 2년 전(t-2) 자료들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를 제시하였다. 발표연도 대비 3년 전(t-3), 4년 전(t-4) 자료들에 대한 기초통계자료는 부록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베타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베타회귀분석은 다음 식(5)와 같이 정의되는 베타분포(beta distribution)에 기반한다. a, b는 형태 모수를,  $\Gamma(x)$ 는 감마함수(gamma function)를 나타낸다.

$$f(y; a, b) = \frac{\Gamma(a+b)}{\Gamma(a)\Gamma(b)} y^{a-1} (1-y)^{b-1}, \quad 0 < y < 1, a > 0, b > 0 \quad (5)$$

이러한 베타분포를 회귀모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식(5)를 평균에 대한 모형으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A = a/(a+b)$ ,  $B = a+b$ 로 모수변환(parameter transformation)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0 < A < 1$ ,  $B > 1$ 이며, 그 결과 모수 A와 B를 갖는 베타확률분포는 다음 식(6)과 같이 도출된다. 확률변수 Y의 기댓값은 A, 분산은  $A(1-A)/(1+B)$ 가 된다(전성해, 2018).

$$f(y;a,b) = \frac{\Gamma(B)}{\Gamma(AB)\Gamma((1-A)B)} y^{AB-1}(1-y)^{(1-A)B-1}, 0 < y < 1 \quad (6)$$

만약 반응변수의 범위가 (a, b)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y' = (y-a)/(b-a)$ 를 통해 반응변수를 (0,1)의 범위를 가지는 자료로 변환한 후에 적용할 수 있다(장은진, 2017).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측정단위가 상이하면서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BLI 세부지표들을 OECD에서 제시한 산식에 따라 모두 0~1점으로 정규화하여 종속 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개구간 (0, 1) 사이에 값이 존재하는 연속형 반응변수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으로는 베타회귀분석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연계함수는 기본 설정인  $g(u) = \log(y/(1-u))$ 를 활용하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삶의 질 종합지수에 대해 민주주의지수, 부패인식지수, 법의 지배, 1인당 GDP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출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종합지수 대신 소득, 건강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소득과 건강이 다른 변수들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정부지출도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참고).

<표 3> 기초통계(t-2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삶의 질 종합지수	161	0.56	0.10	0.33	0.72
소득 관련 삶의 질	161	0.24	0.15	0.00	1.00
건강 관련 삶의 질	161	0.64	0.18	0.16	0.89
정부지출(t-2)(백만달러)	161	602,016.70	1,171,982.00	5,736.10	6,683,982.00
민주주의 지수	161	82.76	7.54	68.30	99.30
부패인식지수	161	69.65	14.75	34.00	94.00
법의 지배	161	0.73	0.19	0.31	1.00
1인당 GDP(백만달러/인구수)	161	39,744.49	13,869.14	22,132.03	95,985.70

〈표 4〉 변수간 상관관계

	삶의 질 종합지수	정부지출 (log)	민주주의 지수	부패인식 지수	법의 지배	1인당 GDP (log)
삶의 질 종합지수	1					
정부지출(log)	0.14 <sup>†</sup>	1				
민주주의지수	0.83***	-0.07	1			
부패인식지수	0.80***	0.03	0.79***	1		
법의 지배	0.81***	0.03	0.82***	0.94***	1	
1인당 GDP(log)	0.80***	0.11	0.74***	0.69***	0.74***	1

<sup>†</sup>p<.1, \*p<.05, \*\*p<.01, \*\*\*p<.001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측정을 통해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VIF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변수로 인해서 추정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며, 일반적으로 VIF가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심해야 한다(민인식·최필선 2012). 분석결과, '법의 지배'가 10.31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법의 지배' 변수를 제외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정부지출이 삶의 질 종합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표 5〉 참고). 해석상에 유의할 점은 t년도에 삶의 질 지수가 발표되었지만 t-1년도, t-2년도에 측정된 자료들이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부지출 시점을 t-2년도로 생각하고 모형을 설계하였다는 점이다.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 모형(1)에 대한 분석결과, 정부지출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민주주의지수와 부패인식지수는 삶의 질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의 민주적 수준(박정인, 2019), 부패의 통제 관련 변수(Hessami, 2010; 김태형 외, 2018)를 통해 정부의 질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로, 정부의 운영과정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관료들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통제가 여전히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1인당 GDP(log)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못했다.

조절변수들과 독립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한 모형(2)에서는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지출의 증가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Hessami, 2010; Ott, 2010; 최정인 외, 2018; 문명재, 2018; 박정인, 2019), 이를 통해 정부지

출이 증가할수록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표 5〉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구분	삶의 질 종합지수		소득 관련 삶의 질		건강 관련 삶의 질	
	(1)	(2)	(3)	(4)	(5)	(6)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정부지출(log)	0.05 (0.13)	<b>3.04***</b> <b>(0.87)</b>	<b>2.44**</b> <b>(0.86)</b>	1.22 (5.35)	0.03 (0.20)	<b>2.74*</b> <b>(1.36)</b>
민주주의지수	<b>0.01*</b> <b>(0.00)</b>	<b>0.10*</b> <b>(0.04)</b>	-0.03 (0.03)	<b>1.11***</b> <b>(0.24)</b>	-0.01 (0.01)	0.09 (0.06)
부패인식지수	<b>0.01**</b> <b>(0.00)</b>	0.02 (0.02)	0.00 (0.01)	0.06 (0.11)	0.00 (0.00)	<b>0.06*</b> <b>(0.03)</b>
1인당 GDP(log)	-0.06 (0.14)	<b>2.55**</b> <b>(0.98)</b>	0.68 (0.80)	-8.62 (5.80)	-0.06 (0.22)	1.94 (1.55)
정부지출* 민주주의지수		<b>-0.01*</b> <b>(0.00)</b>		<b>-0.09***</b> <b>(0.02)</b>		<b>-0.01+</b> <b>(0.00)</b>
정부지출* 부패인식지수		0.00 (0.00)		0.00 (0.01)		<b>0.00*</b> <b>(0.00)</b>
정부지출* 1인당 GDP		-0.23 (0.08)		0.76 (0.5)		-0.18 (0.13)
국가더미변수들	<b>포함</b>					
연도더미변수들	<b>포함</b>					
관측치	161	161	161	161	161	161
LR chi2	670.93	690.48	414.36	439.22	757.58	772.90
Prob > chi2	0.00	0.00	0.00	0.00	0.00	0.00
Log likelihood	480.88	490.66	270.65	283.08	441.51	449.17

+p<.1, \*p<.05, \*\*p<.01, \*\*\*p<.001

추가적인 민감도 분석 결과, 지출시점에서 가장 큰 영향(회귀계수 3.04)을 미치고 시차에 따라 그 영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부록 표 6> 참고). 민주주의 지수와 부패인식지수는 조절변수를 고려하기 전 모형과 동일하게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인당 GDP(log)은 t-2년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1인당 GDP(log)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연구들과 맥

을 같이한다(문지은, 2009; 김태형 외, 2018; 박정인, 2019). 상호작용항의 분석결과를 보았을 때도, 한 국가의 부패통제 정도를 대변하는 부패인식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민주주의지수와 정부지출의 상호작용항을 보았을 때,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출과 경제적 요인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질적 요인인 민주성과 공정성이 점차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부패통제와 같이 관료와 정치인들의 비효율적인 행태를 감시하고 과도한 재정지출을 견제하는 법과 정책 집행의 공정성은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민주주의 절차는 오히려 적절한 정부지출의 신속한 집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2. 정부지출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이 BLI 중 소득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BLI 중 소득 관련 삶의 질은 '가계 순가처분소득'과 '가계금융순자산' 등을 통해 측정되고 있다. '가계 순가처분소득'은 직접세,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제외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말하며, '가계금융순자산'은 금융부채를 차감한 가계 보유 금융자산 총량을 말한다(표 1) 참고).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3)에 대한 분석결과, 정부지출은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고). 시차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 정부지출 시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차에 따라 점차 그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t-4년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7) 참고). 다른 조절변수들 중 국가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log)는 소득 관련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절변수들과 독립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한 모형(4)에서는 앞선 모형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부지출은 소득 관련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부지출이 증가할수록 국민의 소득 관련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2>은 기각되었다. 민주주의지수는 유의미하게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1인당 GDP(log)의 증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OECD 국가들에서 소득 관련 삶의 질, 즉 가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부지출의 증가가 아닌, 사회

의 민주주의 수준과 같은 거버넌스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정부지출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이 BLI 중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BLI 중 건강 관련 삶의 질은 '기대수명(세)', '자기보고 건강상태(%)'를 통해 측정된다. '기대수명(세)'는 현재 사망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적인 기대 수명을 말하며, '자기보고 건강상태(%)'는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응답한 주관적인 의견 중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율을 말한다(〈표 1〉 참고).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 모형(5)에 대한 분석결과, 정부지출의 증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고). 하지만 시차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 정부지출의 영향력은 시차가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8〉 참고). 다만 다른 조절변수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국가 터미변수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지출이나 질적 요인들 외에 국가별 의료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조절변수들과 독립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한 모형(6)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지출의 증가는 개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모든 시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부의 지출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건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부 지출의 영향력은 1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비로소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 삶의 질 종합지수, 소득 관련 삶의 질에 대한 분석과 달리, 민주주의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계수를 가짐에 따라,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지출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민주주의가 발전함과 동시에 오히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책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건 이외의 영역들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더 높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OECD 국가들의 대다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민주주의를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민주주의 발전은 보건 관련 정부지출의 신속한 집행을 지연시켜 개인의 건강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정부지출 시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과정에서의 공정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부지출의 효과성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t-3년도부터 별다른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거버넌스 요인들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1인당 GDP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의 경제발전이 개인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 V. 결론

본 연구는 정부지출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코로나19 이전의 가용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부지출이 국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자료 확보의 용이성과 집단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OECD 소속 국가들로 한정하였으며, GDP 대비 정부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31개국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측정단위가 상이하면서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BLI 세부지표들을 모두 0~1점으로 정규화하여 종속변수로 구성함에 따라, 개구간 (0, 1) 사이에 값이 존재하는 연속형 반응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베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부지출은 일반정부 총지출, 국민 삶의 질은 BLI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준연도는 OECD의 BLI가 발표된 연도를 말하며, 기준연도 대비 2년 이내의 자료들의 활용비율이 6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설명변수들의 시차를 고려하여 2년 전, 3년 전, 4년 전 자료들에 근거한 모형들을 각각 구축하였다.

첫 번째, 정부지출이 삶의 질 종합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민주주의지수와 부패인식지수는 삶의 질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정부지출은 삶의 질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정부지출이 확대될수록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두 번째, 정부지출이 BLI 중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출이 소득에 미치는 정도는 모형(3)(회귀계수 2.44)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차에 따라 점차 그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였을 때, 정부지출은 모든 시차에서 소득 관련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부지출이 증가할수록 국민의 소득 관련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2>은 기각되었다. 민주주의지수는 유의미하게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1인당 GDP(log)의 증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OECD 국가들에서 소득 관련 삶의 질, 즉 가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부지출의 증가가 아닌,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과 같은 거버넌스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정부지출이 BLI 중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정부지출의 증가는 지출시점으로부터 1년차인 t-3부터 개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8) 참고). 이는 정부보건지출을 독립변수로 활용한 기존의 연구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으며(Razmi et al., 2012; Novignon et al., 2012; Yaqub et al., 2012; Kim & Lane, 2013), 이러한 경향은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들에 대한 분석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지출의 증가는 개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모든 시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이 시차가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t-4년도(회귀계수 4.83)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OECD 국가만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을 때, 정부지출의 증가는 국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공선택이론과 신공공관리론의 시각에서는 주요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를 보여 사회의 적정수준보다 정부지출이 팽창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본다. 하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출의 증가는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높여주며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Hessami, 2010; Ott, 2010; 최정인 외, 2018; 박정인, 2019). 이를 통해 정부가 사회·경제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적절한 정부지출의 증가는 국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차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정부지출의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지수와 당해연도의 정부지출, 1년 전의 정부지출, 2년 전의 정부지출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각각에 대해 모형을 개별적으로 구축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지출은 삶의 질에 1년 가량의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종합한 BLI를 정부지출 연구에 활용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거나(Bjørnskov et al., 2007; Hessami, 2010; Yamamura, 2011; 박정인, 2019) 객관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었다(김두래, 2017; 최정인 외, 2018). 향후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렇게 증가한

정부지출이 국민의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BLI와 같이 삶의 질을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들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한계를 또한 존재한다. 우선 삶의 질 지수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OECD의 BLI를 통해 객관적 측면의 삶의 질과 주관적 측면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BLI 내에서도 삶의 질에 더 근접한 지표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표들을 토대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정부지출과 삶의 질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 안전과 같이 특정 영역의 삶의 질을 보다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표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정국가군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국가수준에서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미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들뿐만 아니라 비OECD국가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국가들의 경제발전 수준 및 정치적 수준에 고려한 연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부의 지출총액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부지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정부지출의 총액만으로 경제성장 또는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건강, 환경 지출과 같이 지출목적이 서로 상이한 영역들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보다 정치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정부지출의 구성방식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의 변화 관련 연구가 진행된다면 정부지출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정부지출 데이터에 기반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데이터가 추가된다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증대된 정부지출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참고문헌

- 강구상·최원석·김종혁·오태현·이현진·김승현·박나연. 2020. 《코로나 19 대응 주 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인성. 2008. “OECD 주요국가의 지방정부인력규모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42(1):169-190.
- 기획재정부. 202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 김근세·권순정. 1997. “작은정부 김영삼행정부의 정부규모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31(3):275-293.
- 김근세·박현신. 2009. “노무현 행정부의 국가기능과 규모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 보》, 19(3):125-160.
- 김근세·허아량. 2015. “이명박 행정부의 국가기능과 정부규모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3):367-403.
- 김두래. 2017. “정부의 대표성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공공서비스 정책효과의 국가 비교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6(2):311-335.
- 김상민·김현호. 2019.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사회적 관계 망 및 공동체 부문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성철·박기욱·윤진훈. 2005. “우리나라의 공공선택론적 예산결정행태에 관한 연구 예 산담당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3):133-148.
- 김영범. 201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복지국가 유형별 다양성에 대한 분석.” 《한국사 회학》, 48(2):133-164.
- 김태은. 2008. “정부규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3):111-141.
- 김태형·최정인·정세희·문명재. 2018. “정부의 질과 규모가 국민의 객관적·주관적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22(1):281-306.
- 문명재·주기완. 2007. “정부의 규모 (Size), 기능 (Scope), 역량 (Strength)에 관한 탐 색적 연구: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5(3): 51-80.
- 문지은. 2009. “정부규모와 정부효과성간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3(1): 223-246.
- 민인식·최필선. 《2012. STATA 기초통계와 회귀분석》. 서울: ㈜지필미디어.
- 박성욱. 2020. 《주요국의 코로나 19 위기 정책 대응 및 시사점》. 서울: 한국금융연 구원.

- 박정인. 2019. 《정부의 질과 규모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정현. 2014. “삶의 만족과 정부의 질.” 《행정논총》, 52(1):247-270.
- 보건복지부. 2019. 《OECD Health Statistics 2019》.
- 서문기. 2015. “잘 사는 국가는 행복한가.” 《한국사회학》, 49(1):111-137.
- 손수인·신영전·김창엽. 2010.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30(1):92-110.
- 심수진·이희길. 2016. “삶의 질 측정 국제동향과 통계청의 대응.” 《조사연구》, 17(2):185-205.
- 양종민. 2013. “시장개방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복지지출 구성과 경제적 성과 1980-2007년 OECD 19개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1):107-147.
- 우경숙·신영전. 2015.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대응과 빈곤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3):166-198.
- 윤광재. 2008. “정부재정규모에 대한 국가간 비교분석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4):93-118.
- 윤상호. 2016. 《정부규모와 경제발전: 공무원수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이병윤. 2020. 《코로나 19, 전개 상황과 향후 과제》.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 이승철. 2014. “구미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영향요인과 향상 방안 -중단조사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8(3):109-134.
- 이지은·이영범. 2017.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지출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1(3):69-91.
- 정철현·김정한. 2008. “정부의 최적규모에 관한 연구 Barro 모형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4(2):49-72.
- 정해식·김성아. 2015. “OECD BLI 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삶의 질.” 《보건복지포럼》, 2015(9):75-88.
- 장은진. 2017. “베타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한 건강 관련 삶의 질 자료 분석.” 《한국데이터정보학회지》, 28(3):547-557.
- 전성해. 2018. “베타 회귀분석과 R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특허 마이닝.”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28(4):383-387.
- 최정인·김태형·정세희·문명재. 2018. “정부의 질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21(4):391-409.
- 하태수. 2007. “세계화 이후 한국 정부 규모 및 기능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사

- 회와 행정연구», 18(1):1-26.
- 한병훈. 2015. “정부역량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 홍근석·김종순. 2012. “재정분권과 정부지출규모 간의 관계”. 《지방정부연구》, 16(1): 103-120.
- Afonso, Antonio, & Davide Furceri. 2010. “Government size, composition, volatility and economic growth.”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6(4):517-532.
- Asimakopoulous, Stylianos, & Yiannis Karavias. 2016. “The impact of government size on economic growth: A threshold analysis.” *Economics Letters*, 139:65-68.
- Besley, Timothy, & Masayuki Kudamatsu. 2006. “Health and democracy.” *American Economic Review*, 96(2):313-318
- Bjørnskov, Christian, Axel Dreher, & Justina AV Fischer. 2007. “The bigger the better? Evidence of the effect of government size on life satisfaction around the world.” *Public Choice*, 130(3-4):267-292.
- Cutler, David M, & Mark McClellan. 2001. “Is technological change in medicine worth it?” *Health affairs*, 20(5):11-29.
- Docteur, Elizabeth. 2004. *Towards high-performing health systems: the oecd health project*.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Duffy, Ciaran M. 2007. “Measurement of health status, functional status, and quality of life in children with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 clinical science for the pediatrician.” *Rheumatic Disease Clinics of North America*, 33(3):389-402.
- Easterlin, Richard A, & Laura Angelescu. 2012. *Modern econom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Cross-sectional and time series evidence*. In *Handbook of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 research*. Springer, Dordrecht.
- Fatás, Antonio, & Ilian Mihov. 2001. “Government size and automatic stabilizers international and intranational evi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5(1):3-28.
- Feldmann, Horst. 2006. “Government size and unemployment-Evidence from

- industrial countries.” *Public Choice*, 127(3-4):443-459.
- Fölster, Stefan, & Magnus Henrekson. 2001. “Growth effects of government expenditure and taxation in rich countries.” *European economic review*, 45(8):1501-1520.
- Forte, Francesco, & Cosimo Magazzino. 2011. “Optimal size government and economic growth in EU countries.” *Economia politica*, 28(3):295-322.
- Ghali, Khalifa H. 1999. “Government size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a multivariate cointegration analysis.” *Applied Economics*, 31(8): 975-987.
- Grossman, Philip J. 1988. “Government and economic growth A non-linear relationship.” *Public Choice*, 56(2):193-200.
- Guseh, James S. 1997. “Government size and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a political-economy framework.” *Journal of macroeconomics*, 19(1):175-192.
- Hessami, Zohal. 2010. “The size and composition of government spending in Europe and its impact on well-being.” *Kyklos*, 63(3):346-382.
- Issa, Haitham, & B. Ouattara. 2005. *The effect of private and public health expenditure on infant mortality rates does the level of development matters*. Economics Department, University Of Wales Swansea, United Kingdom.
- Kim, Tae Kuen, & Shannon R. Lane. 2013. “Government health expenditure and public health outcomes: A comparative study among 17 countries and implications for US health care reform.” *America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Research*, 3(9):8-13.
- Mackenbach, Johan P. 2013. “Political conditions and life expectancy in Europe, 1900-2008.” *Social Science & Medicine*, 82:134-146.
- Ngoo, Yee Ting, Nai Peng Tey, & Eu Chye Tan. 2015.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in Asi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4(1):141-156.
- Novignon, Jacob, Solomon A. Olakojo, & Justice Nonvignon. 2012. “The effects of public and private health care expenditure on health status in sub-Saharan Africa: new evidence from panel data analysis.” *Health economics review*, 2(1):22.
- OECD. 2019. *Government at a Glance 2019*.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2020. "Better Life Index"  
<https://doi.org/10.1787/data-00823-en>. 검색일 2020년 4월 20일.

Ott, Jan C. 2010. "Good governance and happiness in nations Technical quality precedes democracy and quality beats siz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3):353-368.

Ram, Rati. 1986. "Government size and economic growth A new framework and some evidence from cross-section and time-series dat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6(1):191-203.

Razmi, Mohammad Javad, Ezatollah Abbasian, & Sahar Mohammadi. 2012. "Investigating the Effect of Government Health Expenditure on HDI in Iran."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 Econom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2:1-8.

Rothstein, Bo O, & Jan AN Teorell. 2008. "What is quality of government A theory of impartial government institutions." *Governance*, 21(2): 165-190.

Yamamura, Eiji. 2011. "The influence of government size on economic growth and life satisfaction a case study from Japan." *Japanese Economy*, 38(4):28-64.

Yaqub, Jameelah O, Taiwo V. Ojapinwa, & Rukayat O. Yussuff. 2012. "Public health expenditure and health outcome in Nigeria The impact of governance." *European Scientific Journal*, 8(13):189-201.

## 부록

〈부록 표 1〉 분석대상 국가목록 및 활용 데이터 범위

국가명	삶의 질 종합지수 (발표시점 기준)	정부지출	결측치 발생 이유
그리스	2013~2017	2009~2016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2018) 누락
네덜란드	2013~2017	2009~2016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2018) 누락
노르웨이	2013~2017	2009~2016	직업안정성(2018) 누락
덴마크	2013~2018	2009~2016	
독일	2013~2018	2009~2016	
라트비아	2016~2018	2012~2016	2016년부터 삶의 질 지수 발표
룩셈부르크	2013~2017	2009~2016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2018) 누락
리투아니아	-	2014~2016	2018년부터 삶의 질 지수 발표, 가계금융운 자산(2018) 누락
미국	2013~2018	2009~2016	
벨기에	2013~2018	2009~2016	
스웨덴	2013~2017	2009~2016	가계금융자산(2018) 누락
스위스	2013~2017	2009~2016	직업안정성, 가계금융자산,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2018) 누락
스페인	2013~2018	2009~2016	
슬로바키아	2013~2017	2009~2016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2018) 누락
슬로베니아	2013~2018	2009~2016	
아이슬란드	2014~2018	2012~2016	2012년부터 정부지출 자료 공개
아일랜드	2013~2017	2009~2016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2018) 누락
에스토니아	2013~2018	2009~2016	
영국	2013~2018	2009~2016	
오스트리아	2013~2018	2009~2016	
이스라엘	2013~2017	2009~2016	기본시설이 없는 가구에 사는 인구비율, 주거 관련지출, 가계 순가처분소득, 가계금융자산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2018) 누락
이탈리아	2013~2018	2009~2016	
일본	2013~2017	2009~2016	교육 이수, 장시간 근로자,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2018) 누락
체코	2013~2017	2009~2016	가계금융자산,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 간(2018) 누락
칠레	2015~2017	2013~2016	2015년부터 삶의 질 지수 발표, 기대수명 (2018) 누락

국가명	삶의 질 종합지수 (발표시점 기준)	정부지출	결측치 발생 이유
			2013년부터 정부지출 자료 공개(OECD)
포르투갈	2013~2017	2009~2016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2018) 누락
폴란드	2013~2018	2009~2016	
프랑스	2013~2018	2009~2016	
핀란드	2013~2018	2009~2016	
한국	2013~2017	2009~2016	장기간 근로자(2018) 누락
헝가리	2013~2017	2009~2016	가계 순가처분소득,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2018) 누락
호주	2013~2017	2009~2016	기본시설이 없는 가구에 사는 인구비율, 개인당 방수(2018) 누락

〈부록 표 2〉 기초통계(t-3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삶의 질 종합지수	159	0.56	0.10	0.36	0.71
소득 관련 삶의 질	159	0.24	0.15	0.00	1.00
건강 관련 삶의 질	159	0.64	0.18	0.16	0.89
정부지출(t-3) (백만달러)	159	603,338.20	1,172,042.00	5,736.10	6,568,282.00
민주주의 지수	159	82.70	7.50	68.30	99.30
부패인식지수	159	69.56	14.81	34.00	94.00
1인당 GDP (백만달러/인구수)	159	39,850.03	13,885.57	22,565.24	95,985.70

〈부록 표 3〉 기초통계(t-4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삶의 질 종합지수	157	0.56	0.10	0.36	0.71
소득 관련 삶의 질	157	0.24	0.15	0.00	1.00
건강 관련 삶의 질	157	0.64	0.18	0.16	0.89
정부지출(t-4) (백만달러)	157	606,174.00	1,178,958.00	5,736.10	6,628,334.00
민주주의 지수	157	82.65	7.45	68.30	99.30
부패인식지수	157	69.48	14.88	34.00	94.00
1인당 GDP (백만달러/인구수)	157	39,948.73	13,906.95	22,565.24	95,985.70

〈부록 표 4〉 변수간 상관관계(소득)

	삶의 질(소득)	정부지출(log)	민주주의지수	부패인식지수	1인당 GDP(log)
삶의 질(소득)	1				
정부지출(log)	0.43***	1			
민주주의지수	0.45***	-0.07	1		
부패인식지수	0.53***	0.03	0.79***	1	
1인당 GDP(log)	0.75***	0.11	0.74***	0.69***	1

\*p<.05, \*\*p<.01, \*\*\*p<.001

〈부록 표 5〉 변수간 상관관계(건강)

	삶의 질(건강)	정부지출(log)	민주주의지수	부패인식지수	1인당 GDP(log)
삶의 질(건강)	1				
정부지출(log)	0.22**	1			
민주주의지수	0.63***	-0.07	1		
부패인식지수	0.45***	0.03	0.79***	1	
1인당 GDP(log)	0.66***	0.11	0.74***	0.69***	1

\*p<.05, \*\*p<.01, \*\*\*p<.001

〈부록 표 6〉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구분	삶의 질 종합지수					
	모형 1 (t-2)	모형 2 (t-3)	모형 3 (t-4)	모형 4 (t-2)	모형 5 (t-3)	모형 6 (t-4)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정부지출(log)	0.05 (0.13)	<b>0.18*</b> (0.09)	0.06 (0.09)	<b>3.04***</b> (0.87)	<b>1.85*</b> (0.83)	0.79 (0.90)
민주주의지수	<b>0.01*</b> (0.00)	<b>0.01**</b> (0.00)	<b>0.01*</b> (0.00)	0.1* (0.04)	<b>0.10**</b> (0.03)	<b>0.09*</b> (0.04)
부패인식지수	<b>0.01**</b> (0.00)	<b>0.01***</b> (0.00)	<b>0.01***</b> (0.00)	0.02 (0.02)	<b>0.06**</b> (0.02)	<b>0.06**</b> (0.02)
1인당 GDP(log)	-0.06 (0.14)	-0.03 (0.13)	-0.04 (0.13)	<b>2.55**</b> (0.98)	0.64 (0.94)	-0.26 (1.03)

구분	삶의 질 종합지수					
	모형 1 (t-2)	모형 2 (t-3)	모형 3 (t-4)	모형 4 (t-2)	모형 5 (t-3)	모형 6 (t-4)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정부지출*민주주의지수				-0.01* (0.00)	-0.01** (0.00)	-0.01* (0.00)
정부지출*부패인식지수				0.00 (0.00)	0.00** (0.00)	0.00** (0.00)
정부지출*1인당 GDP				-0.23 (0.08)	-0.08 (0.08)	0.00 (0.09)
국가더미변수들	포함					
연도더미변수들	포함					
관측치	161	159	157	161	159	157
LR chi2	670.93	684.47	670.38	690.48	713.03	690.89
Prob > chi2	0.00	0.00	0.00	0.00	0.00	0.00
Log likelihood	480.88	487.83	480.58	490.66	502.11	490.83

+p<.1, \*p<.05, \*\*p<.01, \*\*\*p<.001

〈부록 표 7〉 정부지출이 삶의 질(소득)에 미치는 영향

구분	소득 관련 삶의 질					
	모형 7 (t-2)	모형 8 (t-3)	모형 9 (t-4)	모형 10 (t-2)	모형 11 (t-3)	모형 12 (t-4)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정부지출(log)	2.44** (0.86)	1.05+ (0.6)	0.01 (0.7)	1.22 (5.35)	-2.18 (5.71)	-6.87 (5.92)
민주주의지수	-0.03 (0.03)	-0.02 (0.03)	-0.03 (0.03)	1.11*** (0.24)	1.28*** (0.24)	1.34*** (0.24)
부패인식지수	0.00 (0.01)	0.00 (0.01)	0.00 (0.01)	0.06 (0.11)	0.19 (0.12)	0.22+ (0.12)
1인당 GDP(log)	0.68 (0.80)	1.13 (0.85)	0.74 (0.87)	-8.62 (5.80)	-13.86* (6.26)	-19.04** (6.58)
정부지출*민주주의지수				-0.09*** (0.02)	-0.10*** (0.02)	-0.11*** (0.02)
정부지출*부패인식지수				0.00 (0.01)	-0.01 (0.01)	-0.02+ (0.01)

구분	소득 관련 삶의 질					
	모형 7 (t-2)	모형 8 (t-3)	모형 9 (t-4)	모형 10 (t-2)	모형 11 (t-3)	모형 12 (t-4)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정부지출*1인당 GDP				0.76 (0.5)	<b>1.21*</b> (0.54)	<b>1.62**</b> (0.57)
국가더미변수들	포함					
연도더미변수들	포함					
관측치	161	159	157	161	159	157
LR chi2	414.36	403.50	395.08	439.22	438.28	433.62
Prob > chi2	0.00	0.00	0.00	0.00	0.00	0.00
Log likelihood	270.65	263.68	257.97	283.08	281.07	277.24

+p<.1, \*p<.05, \*\*p<.01, \*\*\*p<.001

<부록 표 8> 정부지출이 삶의 질(건강)에 미치는 영향

구분	건강 관련 삶의 질					
	모형 13 (t-2)	모형 14 (t-3)	모형 15 (t-4)	모형 16 (t-2)	모형 17 (t-3)	모형 18 (t-4)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정부지출(log)	0.03 (0.20)	<b>0.28<sup>+</sup></b> (0.15)	<b>0.43**</b> (0.15)	<b>2.74*</b> (1.36)	<b>3.61*</b> (1.42)	<b>4.83**</b> (1.40)
민주주의지수	-0.01 (0.01)	-0.01 (0.01)	-0.01 (0.01)	0.09 (0.06)	0.09 (0.06)	0.05 (0.05)
부패인식지수	0.00 (0.00)	0.00 (0.00)	0.00 (0.00)	<b>0.06*</b> (0.03)	0.05 (0.03)	0.04 (0.03)
1인당 GDP(log)	-0.06 (0.22)	0.02 (0.22)	0.10 (0.21)	1.94 (1.55)	2.55 (1.62)	<b>4.18**</b> (1.6)
정부지출*민주주의지수				<b>-0.01<sup>+</sup></b> (0.00)	<b>-0.01<sup>+</sup></b> (0.00)	0.00 (0.00)
정부지출*부패인식지수				<b>0.00*</b> (0.00)	0.00 (0.00)	0.00 (0.00)
정부지출*1인당 GDP				-0.18 (0.13)	<b>-0.24<sup>+</sup></b> (0.14)	<b>-0.37**</b> (0.14)
국가더미변수들	포함					
연도더미변수들	포함					

구분	건강 관련 삶의 질					
	모형 13 (t-2)	모형 14 (t-3)	모형 15 (t-4)	모형 16 (t-2)	모형 17 (t-3)	모형 18 (t-4)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관측치	161	159	157	161	159	157
LR chi2	757.58	752.23	757.70	772.90	767.57	776.09
Prob > chi2	0.00	0.00	0.00	0.00	0.00	0.00
Log likelihood	441.51	437.97	439.98	449.17	445.64	449.18

<sup>†</sup>p<.1, \*p<.05, \*\*p<.01, \*\*\*p<.001

## **Does the Government Expenditure Affect the Quality of Life?: Evidence from the OECD Countries**

YeongHun Won & Ji Woong Yoon

Corona 19 has given us an opportunity to reflect the way the government operates and its role in terms of the citizen's quality of life.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minimize the damage due to this serious infectious disease. Hence, this research focus on the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quality of life. However, existing studies have not suggested consistent conclu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have limitations to measure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using hard data systematically. To overcome the limitation, this study empirically estimated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quality of life using the "Better Life Index" provided by OECD.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quality of life is significant. In the models of income and health, the influence of government expenditure increased gradually from the time of expenditure. It is found that the increase in government expenditure has a positive effect on people's lives in OECD. Moreover, it is proved that the conceptual changes of the quality of life can lead to different results.

※ Keywords: Public expenditure, Quality of life, Better Life Index